

주간동향 [2006. 10.4~10.11]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02-3156-7137
 kwdi_trends@kwdi.re.kr

- ❖ 지자체 여성 관련 예산 여전히 크게 낮아
-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로 본 서울의 여성' 발표
- ❖ 법무부, 여성 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자료 발표
- ❖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
- ❖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대책 보고서 제출
-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 교원 비중 증가

❖ 지자체 여성 관련 예산 여전히 크게 낮아

16개 광역시·도의 순수 여성 관련 예산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체 예산구조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지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월 10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16개 광역시·도 여성 관련 예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평균 예산은 약 1,159억 원으로 일반 회계 총액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3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에 불과했던 2001년에 비해서는 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 보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 중 아동 보육과 가족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들의 권익과 성평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여성예산은 약 108억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여성정책의 저예산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특히 여성정책 전담부서 사업으로 잡아놓은 예산 중 2억 4천만 원은 어른 섬기기 교육,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등에 사용됐다면서, 이는 여성을 전업 주부와 돌봄의 주체로만 여기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발전 책무를 규정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경북, 충남 등 3곳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발전 의

지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또 조례 내용이 가장 부실한 지자체로 꼽힌 강원도는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 관련 정보 구축’,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 성인지 정책의 도구 마련 촉구 조항 5개 항목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경남, 제주, 충북은 각각 1개의 항목이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트워크는 이어 성평등 정책은 단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아울러 여성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국 단위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 서울지방통계청, ‘통계로 본 서울의 여성’ 발표

10월 8일 서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본 서울의 여성’ 자료에 따르면 서울 여성들의 초혼 평균 연령은 지난해의 경우 28.6세로 2000년(27.3세)에 비해 1.3세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여성들의 초혼 평균 연령은 2001년 27.5세, 2002년 27.8세, 2003년 28.0세, 2004년 28.3세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울 여성들의 재혼 평균 연령도 지난해의 경우 40.2세로, 2000년 38.2세, 2001년 38.3세, 2002년 38.5세, 2003년 38.7세, 2004년 39.6세 등과 비교할 때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지난해의 경우 7만1천 건(쌍)으로, 2000년 7만9천 건, 2001년 7만7천 건, 2002년 7만3천 건, 2003년 7만3천 건, 2004년 7만2천 건과 비교할 때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다. 또 이혼 건수는 2000년 2만5천 건, 2001년 2만9천 건, 2002년 2만9천 건, 2003년 3만2천 건, 2004년 2만7천 건, 2005년 2만5천 건 등으로,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 건수가 줄어든 이유는 일정 기간 이혼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는 이혼 숙려제 시범 도입, 혼인 건수 감소 등과 관련이 있다고 서울통계청은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사망한 서울 여성은 1만7천 명에 이르며, 이들을 사망 원인별로 보면 암이 25.0%(4,262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뇌혈관 질환(15.2%, 2,590명), 심장 질환(8.0%, 1,364명), 당뇨(4.4%, 748명), 자살(4.1%, 694명)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올해 서울의 총인구(1천4만3천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49.8%(500만6천명)를 차지, 2000년에 비해 0.2%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서울 지역의 성비(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 비율)는 100.6명으로 2000년보다 0.9명 낮아져 남녀의 비율이 비슷해졌다. 성비가 가장 높은 연령층은 10대(10~19세)로 112.4명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출생한 어린아이(8만9천 명) 가운데 여자 아이는 4만3천 명으로 성비는 106.6명이었다. 이는 2000년 108.9명보다 2.3명 줄어들어 자연성비(103~107명) 범위 안에 드는 것이라고 서울통계청은 설명했다.

❖ 법무부, 여성 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 자료 발표

법무부가 10월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고자료로 올려놓은 호원대학교 이만중 교수의 ‘한국의 여성범죄 증가원인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1994년도 여성범죄자는 총 범죄자(146만

3,186명)중 12.5%(18만3,027명)였으나 2004년에는 총 범죄자(230만2,813명)중 18%(40만714명)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범죄자 100명 중에서 여성이 18명 꼴인 셈이다.

2003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범죄는 사기(9만2,418명)였고 전체 사기사범 가운데 28.2%를 차지했다. 전체 범죄 대비 여성비율이 높은 범죄는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으로 5,513명이 단속돼 여성비율이 49.4%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41~50세와 31~40세의 여성범죄가 각각 매년 20%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중 41~50세 여성범죄의 경우, 1999년에는 9만6,952명(26.7%)에서 2003년에는 10만2,016명(28.6%)으로 늘어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범죄 추이를 보면 고졸 이상의 여성범죄자가 30~40%대로 가장 많았고, 무학 및 초등학교 졸업자의 범죄는 점차 감소했다.

❖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국정감사 자료 제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60% 정도가 50인 미만의 중소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0월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해 지방 노동관서에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 56개 중 50인 미만 업체가 34개로 전체의 60.8%를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60.8%), 50~100인 미만(19.6%), 100~300인 미만(10.7%), 300인 이상(8.9%) 등으로 조사돼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성희롱 사건이 적었다.

또 성희롱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별로는 20~30세 미만(46.2%)과 30~40세 미만(34.6%)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성희롱 가해자(모두 남성임)는 40세 이상이 전체의 75.0%를 차지했고 가해자의 91.7%가 사업주 또는 상급자였다. 성희롱이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 내가 51.9%로 가장 많았다.

❖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대책 보고서 제출

10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급 병, 의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15~44세 사이의 여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2004년 기준)를 실시한 결과 낙태 수술 건수가 모두 34만2,433건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고려대 의과대학 산부인과와 예방의학교실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전국 775개 의료기관과 15~44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마련’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낙태 수술 건수는 전체의 약 58%가량인 19만8,500여 건이었으며, 미혼여성은 42%가량인 14만3,900여 건이었다. 1,000명당 기혼여성 28.6건, 미혼여성 31.6건으로 분석됐다. 연령별 낙태 수술 비율은 20~24세가 1,000명당 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5~29세 40건, 30~34세 38.1건 순이었다.

그러나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 중 현행 모자보건법이 허용한 범위(부득이한 사정으로 28주 이내 낙태하는 경우로 건강보험이 적용됨) 내에서 수술을 받은 건수는 1만4,900여 건(4.4%)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5,100여건, 25~29세가 4,200여 건이었다. 나머지 95%가량인 33만여 건은 불법 시술을 받은 셈이다.

이 보고서는 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 20~39세 미혼여성의 성경험률이 39.1%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15~44세 미혼여성의 성경험률은 23.3% 수준이었다. 낙태수술을 받은 이유로는 미혼여성의 96.0%가 사회경제적 이유(미혼, 미성년자, 경제적 어려움 등)를 들었고 기혼여성은 76.7%가 가족계획(자녀 불원, 태울 조절, 원하는 성별 아님)을 들었다.

❖ 교육인적자원부, 여성 교원 비중 증가

초·중·고의 여성 교장·교감이 해마다 늘어 전체의 1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8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초·중·고 교장 8,952명 가운데 여성은 827명으로 9.2%, 교감 9,557명 중 여성은 1,540명으로 16.1%를 차지, 전체 교장·교감 1만8,509명 가운데 12.8%인 2,366명이 여성으로 집계됐다. 2001년에는 여성 교장 비율이 7.3%, 여성 교감 비율이 9.5%였다.

전체 교원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이 초등 72%, 중학 63%, 고교 39.1%인 점을 감안하면 여성의 교장·교감 비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중학교가 15.2%로 높았고 초등학교는 12.8%, 고교는 5.6%였다. 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 등 교육전문직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24.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4.8%로 가장 높았고 부산 23.4%, 경기 18.4%, 대구 17.6%, 광주 12.6% 순이며 강원 4.9%, 전남 5.7%, 경북 6.8%, 경남 7%, 충북 7.6%, 충남 7.8% 등은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